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820
----------	------

발의연월일 : 2024. 12. 23.

발 의 자 : 박해철 · 박지원 · 김동아
허성무 · 조인철 · 이병진
이재강 · 최민희 · 백승아
이수진 · 임호선 · 김 윤
박용갑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해 원인조사 시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단 직원이 원인조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재해 원인 규명을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3항, 제156조제1항, 제162조제3호의2, 제170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6조제1항 중 “역학조사”를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로 한다.

제16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조사에 참여하는 자

제170조제2호 중 “고용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 ----- ----- ----- -----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이하 “공단 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u>고용노동부장관의</u>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③ ----- ----- <u>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u>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 ----- ----- ----- ----- -----

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62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설>

4. ~ 13. (생략)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56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2조(비밀유지)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6조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하는 자

4. ~ 13. (현행과 같음)

제170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

<p>을 훼손하거나 <u>고용노동부장관</u>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p> <p>3. ~ 8. (생략)</p>	<p>-----<u>고용노동부장관 및 공단 등</u>-----</p> <p>-----</p> <p>3. ~ 8. (현행과 같음)</p>
--	---